

보도시점 2024. 1. 8.(월) 12:00

[2024년 행정안전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연계 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도모
- 특례발굴, 시행계획 수립 등 지자체 행정적 지원 확대
- 맞춤형 통계자료, 실무자 컨설팅 제공 등 지역 역량 강화 지원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기금활용) ㄱ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사업을 기획하여 1,500억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단지 내 교육 및 체험동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건립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스마트팜 조성에 발맞춰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한다.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고, 스포츠센터, 커뮤니티 시설, 파크골프장 등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
- (특례발굴) 인구감소지역인 ㄴ군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도모한다. 또한 주거지 인근 유희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젊은층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 (역량강화) ㄷ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소멸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행안부·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생활인구 산정 자료에 따르면 ㄷ군은 주민등록인구의 5배에 가까운 20~30대가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 특성 MBTI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2030 세대의 유입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정량·정성통계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효과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이를 위해 ▲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 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 *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배분
 -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23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20억원 → ('24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44억원
 - 아울러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 또한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 * 단,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승인 필요
 -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투자를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채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출자, 사업규모 약 3조원(사업 15개x사업당 2,000억원) 추산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한편,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 8개 부처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교육부(2024년 추가), 중기부

** 기존 7개 지자체 :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

- 중기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36개의 특례 → '24년까지 70개로 확대 계획

- 더불어,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도 및 시·군·구 '24.2월, 중앙 '24.3월)하여 지방소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하여 지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 * 현재 7개 인구감소지역(단양, 보령, 철원, 영암, 영천, 고창, 거창) 시범 산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특성을 유형화한 (가칭)지역 특성 MBTI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 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22)



분야	사업 내용
산업 ·일자리	경남 밀양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소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연구동을 조성하고, 연구동 내 소재·부품을 시험·평가·인증하는 장비를 구비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정주 여건	충남 서천군은 '도시민이 찾아오는 맞춤형 농촌스테이'를 조성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한다.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한옥체험 숙박동을 조성하고, 생태 학습랜드 등을 운영한다.
교육	강원 평창군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플러스학습센터'를 조성하고 놀이·체험·교육 관련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 및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라 '누구나농장 농촌체험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활력 제고를 기대한다.
문화 ·관광	전남 강진군은 관광산업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한다. 기금을 활용하여 체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푸소(FU-SO)'의 기반을 정비한다. 다산 청림연수원 생활관을 확충하고, 사의재 주변 생활형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체험과 숙박의 기회를 제공, 머물고 싶은 강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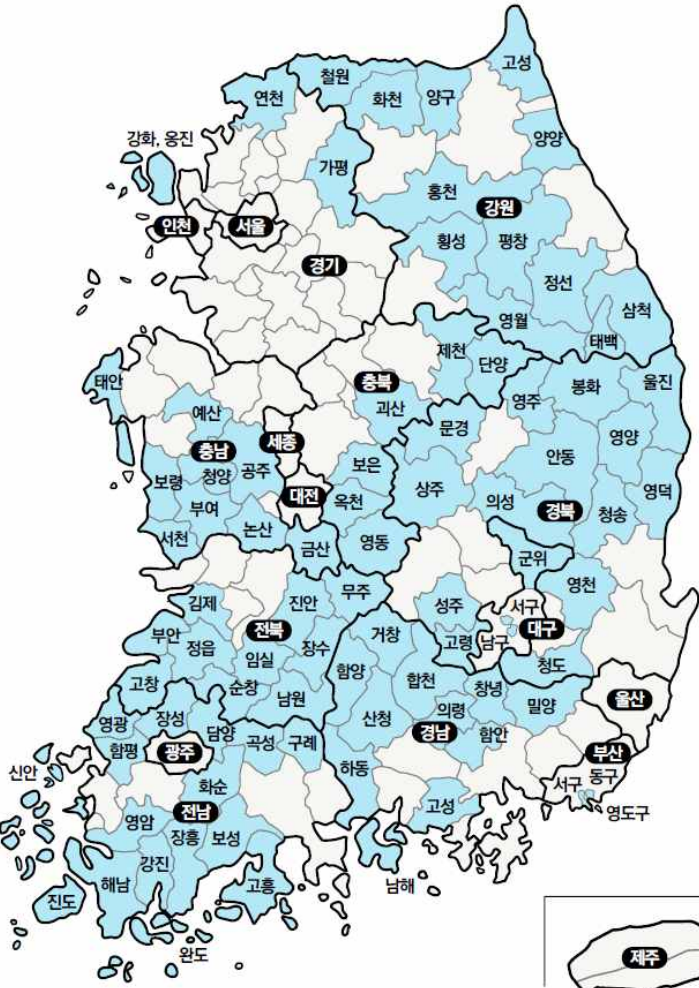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10), 시행('23.1.1~)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 활용)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11개)

- (지정주기) 5년('21.10월 최초 지정)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3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년~'31년)
 -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제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근거
 - (기초계정)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 ('23년 기준)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20%), 기금사업(40%), 타 재정·정책 연계 방안(20%), 운영 및 관리체계(15%), 기타(5%), 가점(최대 3점) 등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원)	▶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

붙임 4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36건) 현황

분야	주요 내용
보육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21)
	(국가·지자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21)
	(3)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21)
교육	(교육감)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22)
	(교육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분교를 폐교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22)
	(시·군·구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 가능(\$22)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22)
	(교육감)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22)
	(교육감)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22)
	(11) (교육부장관·지자체장)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22)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가능(\$22)
	(국가·지자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및 시설·설비 확보 등에 필요한 지원 가능(\$22)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하여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22)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22)
의료	(국가·지자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23)
	(국가·지자체) 지역 보건의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23)
	(4) (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23)
	(시·도지사) 의료취약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23)
주거·교통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24)
	(국가·지자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24)
	(지자체)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24)
	(국가·지자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24)
	(국가·지자체)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24)
	(6)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24)
문화	인구감소지역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25)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25)
	(5)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25)
	(국가·지자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25)
	(문화부장관)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25)
그외	(행안부장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가능(\$14)
	(법무부장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26)
	(국가·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의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28)
	(국가·지자체) 인구감소대응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협약 체결 가능(\$10)
	(7) (지자체) 노후·유휴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 가능(\$27)
	(국가·지자체)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가능(\$16)
	(국가·지자체) 일자리 정보 제공, 컨설팅 등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17)